

인사청문회로 간 '김건희 공방'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野 "남몰래 金 조사에 분노" 공세 與 "권양숙·조국도 비공개 소환" 野, '李재판 병합 기각' 비판도

22일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야는 검찰이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의 의혹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공방한 데 이어 이 후보의 재판 병합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면서 "법조인들은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당연히 공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공개로 갑자기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몰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유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그 이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로 조사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민주당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는 이 후보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의 김기표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재판을 받는데, 수원에서 따로 받으면 일주일 내내 받아야 한다"면서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의 경우 재판이 지연돼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원칙 없는 김여사 조사, 국민께 깊이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모두 제 책임...진상 파악 후 조치"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면서도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총장으로 취임해 오는 9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민주당 전대, 한사람 위한 행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 대표 후보가 22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이재명 후보에게 물표를 준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했다가 철회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벅갓볼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회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합동연설회란 말인가"라며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포판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이 지난 20일부터 지역별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돼 연설 종료 20분 뒤 마감되는 탓에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되고, 강성 친명의 표가 이 후보에게 몰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쓰레기" 발언은 후보 뜻이 와전돼 메시지팀이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라며 "메시지팀장과 SNS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도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안도걸,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자녀 세액 공제액을 늘리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자녀 세액 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세액 공제액은 현행 3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날다.

안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2년 기준)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후 수



년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출생 통계(잠정)에 따르면 첫째아가 60.1%, 둘째아가 32.3%, 셋째아 이상은 7.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둘째아부터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상황을 고려한 첫째아 지원 확대, 다자녀 전폭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5만명 동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잃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충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